

외교부는 10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됐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韓觀洙) 대인민공화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궁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협의 내용을 전했다.

배포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한중 간 협의는 사드 갈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한미일 3각 공조 심화 속에 한중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중국의 판단, 당 대회 후 넓어진 중국의 외교적 운신 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국이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드 협의가 봉합된 이후 양국 관계는 조금씩 회복돼 갔다. 2017년 11월에는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13일부터 3박4일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민 방문하며 빠른 관계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 폭 17년 만에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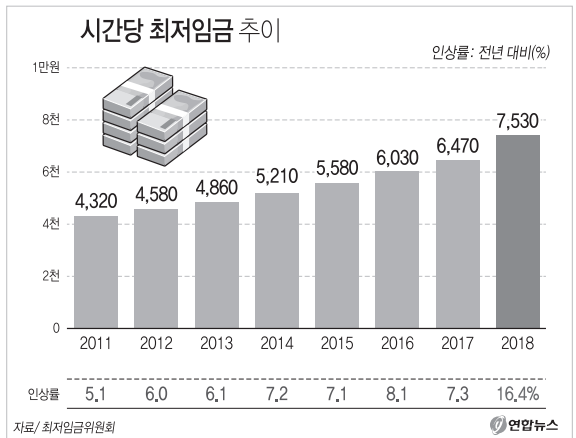
2018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의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폭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며 2020년까지 정부 방침대로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첫걸음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7년의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의 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 18.8%, 2000년 9월~2001년 8월의 16.6%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다.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수년간 인상이 극도로 저조해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다.



이 같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2017년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1천370원을 받게 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로 전체 근로자 100명 가운데 24명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된다.

노동계는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이르러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가파른 인건비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인상이 두 자릿수가 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위축 심리가 확산하면서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I)는 2018년 2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외식업계, 줄줄이 가격 인상

2017년 8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했다.

TF는 최종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두고 2017년 말부터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12월 말 업계에 따르면 놀부부대찌개는 대표 메뉴인 놀부부대찌개 가격을 7천500원에서 7천9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 찌개류 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2010년 6월 이후 7년 5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신선설농탕도 12월 4일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설렁탕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14% 올랐다. 앞서 롯데리아도 11월 말부터 불고기버거(2.9%), 새우버거(5.9%)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 업체가 2018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가격을 미리 올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외식물가 상승 폭은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0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공사 중단 기간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에 방수포가 덮여 있다.

지화하겠다는 정책은 원자력 업계와 건설지역 내 일부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공론조사는 공약을 강행하기도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정부가 찾은 묘안이었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정보를 충분히 접한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공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법을 말한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우려가 적지 않았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 ▲국민 의견 수렴에 3개월은 너무 짧다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등 각종 우려가 쏟아졌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외신기자클럽이 12월 6일 개최한 ‘2017 SFCC 송년의 밤’ 행사에서 언론상 수상소감을 통해 “위원회가 탄생부터 축복받지 못한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두렵고, 긴장되고, 앓음한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 ■ 공론화위·시민참여단, 찬반 팽팽한 가운데 ‘공론화’ 성공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7월 24일 출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제한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위원을 2명씩 선정했다.

공론화 과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에너지 분야 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하자 전문가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회가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되자 7월 14일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의결했다.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 학계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공론화위원

##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 ■ ‘건설 중’ 원전 첫 일시중단…‘시민’에 공 넘김 정부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재개 여부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들이 좌우하던 국가 에너지 정책 선택권을 국민에게 맡긴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해 온 환경단체 등이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에 달하고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백